

금융투자업규정

<목 차>

1. 개별법상 펀드를 이용한 불건전영업행위 방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 성 자	이름	홍연제
	담당부서 (과)	자산운용과		직급	행정사무관
	국장	이윤수		연락처	02-2100-2663
	과장	고영호		이메일	fsc0142@mail.go.kr

2022. 07. 26. 작성

정책책임자 직위

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개별법상 펀드를 이용한 불건전영업행위 방지														
	2.규제조문	금융투자업규정 제4-63조														
	3.위임법령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												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22.07.29 ~ 2022..0.8.						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○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관련 불건 전영업행위 규율을 강화했으나,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타법상 사모펀드 등을 이용한 규제우회, 회피가 가능함에 따라 제도보완이 필요														
	7.규제내용	○ 자산운용사가 타법상 펀드 운용업무를 겸영하는 경우, 타법상 펀드와 자본시장법상 공·사모펀드 간 자전거래하거나, 교차·순환 투자하는 경우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												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div>○ (피규제집단) 자산운용사</div> <div>○ (이해관계자) 투자자,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관계부처</div> <table><tr><th colspan="2">유 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/tr><tr><td>피규제자</td><td>자산운용사</td><td>22.3월말 기준 362개사</td></tr><tr><td>이해관계자</td><td>투자자</td><td>-</td></tr><tr><td>관련기관</td><td>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관계부처</td><td>-</td></tr></table>			유 형		인원수 또는 규모	피규제자	자산운용사	22.3월말 기준 362개사	이해관계자	투자자	-	관련기관	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관계부처	-
	유 형		인원수 또는 규모													
피규제자	자산운용사	22.3월말 기준 362개사														
이해관계자	투자자	-														
관련기관	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관계부처	-														
9.규제목표	○ 자본시장법, 타 법상 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행위 차단을 통 해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						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											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											
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○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강화로 일부 자산운용사의 부담이 증가 할 수 있으나, 투자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과 규제 차익 발생가능성 차단이라는 편익에 비해서 비용이 극히 작음														
기타	12.일 물 설 정 여부	미설정														
	13. 우선허용· 사후 규제 적용여부	미적용												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-63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10. (생략) 11. (삭제)	제4-63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(이하 이 조에서 ‘특수집합투자기구’라 한다)의 재산(이하 이 조에서 ‘특수집합투자재산’이라 한다)과 거래하는 행위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과 특수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가.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</u> <u>나. 「선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선박투자회사</u> <u>다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</u> <u>라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처투자조합</u> <u>마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</u> <u>바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전문투자조합</u> <u>사. 「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</u> 12. <u>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특수집합투자기구(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제3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</u>
< 신 설 >	

현 행	개 정 안
	<u>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) 간 교차하거나 순 환하여 투자하는 행위</u>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**(현황 및 문제점)**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경우 자전거래, 교차·순환 투자 금지 의무가 적용되나, 타법상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규율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
 - 이에 따라, 타법상 펀드 운용업무를 겸영하는 자산운용사가 해당 규제차익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
- **(개선방안)**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법상 펀드 운용업무를 겸영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, 타법상 펀드를 이용한 자전거래 및 교차·순환투자 행위를 금지할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**(현행유지안)** 동일 자산운용사임에도, 자본시장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 등만 금지하고 타법상 펀드를 이용한 행위는 규율하지 않음
: 규제차익 발생으로 인해 기존규제의 실효성 도모 불가,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 등으로 선택불가
- **(대안1)** 타법상 펀드 운용업무를 겸영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타법상 펀드를 이용한 자전거래, 교차·순환투자 행위를 금지
: 타법상 펀드를 이용하여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,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등 현재 허용하고 있는 자전거래의 경우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지 않음
- **(대안2)** 대안1과 동일한 규율을 하되, 법령 및 감독당국의 관여는 최소화하고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규율해 나가도록 행정지도 등의 수단을 활용
: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이 강화됨으로 인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타법상 펀드 운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, 행정

지도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들의 규율이행을 담보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일시 · 장소 · 방법	제시의견	조치결과
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	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, 의견수렴	특이사항 없음	-
자산운용사 투자자			
	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예정		필요시 반영예정

3. 규제 목표

☐ 타법상 펀드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

⇒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의 공백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한 투자자 피해사례가 타법상 펀드와 관련하여 재발하는 상황을 방지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목적·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: 해당사항 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: 해당사항 없음

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	해당 여부
(A)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	해당없음
사업자의 진입 또는 일부 사업자의 상품등 제공능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, 이미 진입한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함	
(B)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	해당없음
집합투자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, 사업자 간 경쟁능력의 차이를 유발하는 내용 아님	
(C)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	해당없음
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,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토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	
(D)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	해당없음
집합투자업자가 자전거래, 교차순환투자 등 불건전한 운용행위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,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무관	

- 중기영향평가

: 동 규제는 펀드를 설정·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
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① 규제 영역	금융
② 규제 방식	기준설정
③ 예비분석모델	
	판단 근거
④ 대상 업종	
⑤ 예비분석내용	
⑥ 차등화적용 여부	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: 이미 진입해서 자본시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 운용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불건전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, 진입·경쟁의 제한 또는 신산업 분야의 시장기능에 대한 개입에 미해당

- 일몰설정 여부

: 존속기한 도과 후 폐지되는 경우, 시장질서 저해 및 투자자보호에 공백 발생 등 부작용 발생가능함에 따라 일몰 설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: 해당사항 없음

관련 국제기준	일치여부	불일치 사유(불일치 시에 한함)
해당없음		

○ 타법사례

: 해당사항 없음

III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: 위반에 따른 제재가능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: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: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: 특이사항 없음

2. 향후 평가계획

: 협회 자율점검,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

3. 종합결론

: 이미 도입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을 우회하는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규정개정 필요